

전남대·조선대, 현 고2 대입 학생부 전형 '학폭 이력' 반영

대교협,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표...전국 112개 대학 146개 대학, 자연계 수능 필수 영역 지정 폐지로 '문과 침공' 해소

전남대와 조선대 등 전국 112개 대학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문과 침공'을 해소하기 위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146개 대학에서는 자연계열 진학 학생들에게 적용해온 수능 필수 영역 지정을 폐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6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취합해 26일 공표했다.

학종에선 112개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목포대를 비롯해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한국의국어대·한양대 등 서울 주요 16개교가 모두 포함됐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건국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한양대 등 21개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나온 것이다. 2023학년도 대입과 견주면 5개교(감리교신학대·서울대·세종대·진주교대·홍익대)에서 16개교가 늘었다. 전남대 등 주요 대학은 학폭 조치를 세부적으로 몇 점 감점할지,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광신대를 비롯해 건국대·고려대·동국대·서울시립대·연세대 등 27개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 논술 전형에선 건국대·서울시립대·한양대 등 9개

대학이, 체육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실기·실적 전형에선 건국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 등 25개 대학이 학폭 조치를 평가에 고려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전형을 운영하는 88개 대학 모두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조선대·순천대·목포대·목포해양대가 포함됐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자연·공학·의학 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은 146개교로, 1년 전보다 17개교 늘었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선 건국대·경희대·광운대·동국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 9개교가 자연·공학·의학 계열 지원 수험생에게 수능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 영역 응시를

2025학년도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 먼저 필수 영역 지정을 폐지한 서강대를 포함하면 서울 주요 대학에선 총 10개교가 된다. 이에 따라 수학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등을 주로 선택하는 문과생들도 의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경희대·광운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 등 15개교는 자연·공학·의학 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수학 미적분·기하, 과학 탐구 영역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줘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수학, 탐구 가운데 일부 영역에서만 필수 지정을 폐지한 대학은 고려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 등 6개교로 집계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하자”

정의당 광주시당, 월 1만원 제안
광주에서도 월 1만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26일 광주시청 앞에서 '무상 교통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858억 원의 재원이면 광주에서 월 1만원 정기권 제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대중교통 1만원 통합정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정기권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면서 "독일은 '9유로 티켓'이라는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해 물가 상승률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대기질 향상

등의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 1만원 통합 정기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공공교통 특별회계'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도로·철도 등의 건설에 쓰고 자동차운전자에 내는 세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재정을 운영하고 중앙정부에서 절반을 지원받으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 인구의 절반 가량이 71만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교통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대중교통 1만원 정기권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교통을 도입하는 조례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철회를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영광군 흥농읍 한빛원전 앞에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계획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이는 영광군민에 대한 도발행위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 제공>

전교생 10명 넘으면 통폐합 안한다

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학생수 기준 하향

전남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 적정규모학교 학생수 기준 하향을 통해 관리 학교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학교 증가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데다 '작은학교 교육력 높이기' 정책에 따른 개별 맞춤형 교육의 장점을 살려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전남은 섬과 농산어촌이 많아 '전남 작은학교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비율이 42.8%에 이른다. 소규모 학교는 소극적인 재정투자로 교육환경 약화와 교육격차 심화를 부르지만, 학부모 등의 학교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도 교육청은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하향함으로써 관리 학교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통폐합은 전교생 1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1명 1교(분교장 포함)·1도서 1교(분교장 포함)·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 등은 제외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과 관련, 지역별로 학생수 10명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소속 강사들 “처우 개선해 달라”

교육연구비 지급·모든 강사에 퇴직금 적립·건보 적용 등 요구

전남대 소속 대학 강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소속 강사 20여명은 26일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에게 노동자로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속하는데 임금에는 '시간 당 강의료'만 받고 있다"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학강사의 처우는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전인 시간강사 때와 다를 바 없다"며 "교원의 처우가 열악하면 그만큼 교육의 질도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교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조교와 직원들에게도 지급하고 있는 교육연구비, 학생지도비 등 각종 수당의 지급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합리한 차별이다"고 설명했다. 연구와 교육·지도 등으로 국가와 학술 공동체

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시간강사에게 교육연구비와 학생지도비 지급 ▲주당 5시수 퇴직금 적립 기준 철폐와 모든 강사에게 퇴직금 적립 ▲직장건강보험 적용 등을 대학과 정부에 요구했다. 또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고 강사에게 병가를 허용할 것 등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조선대·영남대·대구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천희희 기자 strong@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